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貿易과 經濟協力

林 鍾 哲*

<目 次>

I. 머릿말	4. 黑字基調定着期(1986~)
II. 韓國貿易의 成就	IV. 國際化時代의 課題
III. 國際經濟의 發展의 段階의 分析	1. 貿 易
1. 停滯期(1945~61)	2. 外換・資本
2. 效率的 成長期(1962~73)	3. 經濟協力
3. 成長鈍化期(1974~85)	V. 맷는말

I. 머릿말

1987년 현재 우리의 수출은 472.8억 달러로 세계수출의 2.0%를 점함으로써 세계수출순위 1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수입은 410.2억 달러로 세계수입의 1.7%를 차지하여 세계수입순위 14위에 위치하고 있다.⁽¹⁾ 세계수출의 2.0%라고 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20개 工業先進國이 수출총액의 72.9%를 차지하고 난 나머지 27.1%를 나머지 119개 국가가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보면 매우 큰 것이다.

한편 1959년에 시작되어 1985년에는 468억 달러로 GNP의 55.8%에 까지 이르렀던 外債도 1987년 말에는 356억 달러로 줄어들고, 그반면 1988년 6월 말 현재로 592건, 10.4억 달러에 달하는 資本輸出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는 바야흐로 국제경제적 발전의 제 2 단계인 成熟債務國에서 제 3 단계인 未成熟債權國으로 진입하는 전환기에 분명히 있다.

더구나 88올림픽의 성공적 완수를 계기로 北韓 등 극소수의 教條的 共產

*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

(1) 수출, 수입을 합한 무역총액을 기준하면 그 순위는 12위, 무역シェ어는 1.9%이다.

國家를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와 直接貿易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開發途上國 및 공산제국과 적극적인 經濟協力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무역과 경제협력 등 모든 경제부문에서 선진공업국, 개발도상국 및 공산주의 국가들과 全方位의in 교류와 협력을 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해야 한다.

1백개미만의, 그나마 대부분 1차상품인 수출상품을 가지고 불과 20여개의 인접국가들과 3천만달러 수준의 수출입무역 관계를 갖고 총 31.4억 달러(1945~61년 累計額)의 無償援助에 의하여 생존을 유지해 왔던 1945~61년의 한국 경제 및 무역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한국의 국제경제적 지위는 놀라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 韓國貿易의 成就

한때 GNP의 23.0%에 까지 달하였던⁽²⁾ 무상원조에 安住해 왔던 한국경제는 援援國인 미국이 1958년의 國際收支危機를 계기로 원조를 크게 삭감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원조의 격감은 때마침 야기된 소비재 산업부문에서의 過剩生產恐慌과 상승하여 4·19와 5·16의 政變을 유발하였고 급기야 成長第一主義의 經濟計劃의 실시를 가져왔다.⁽³⁾

1962년에 실시된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李承晩政權의 7개년계획, 張勉政權의 5개년계획이 가지고 있던 人間資本중심, 國民資源중심의 개발전략, 分配의 正義에 역점을 둔 개발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非人間資本중심, 大企業중심의 개발전략과 '先建設·後分配'란 개발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같은 非人間資本 중심의 成長第一主義의 開發戰略은 방대한 투자수요를 낳았고⁽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強制貯蓄⁽⁵⁾까지도 불사한 內資의 극대동원이,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2) 1957년의 무상원조는 382.9백만달러로 그해 GNP의 22.98%에 달했었다. 1953~61년 간의 원조총액은 22.8억 달러로 그 기간 중 GNP에 대한 비율은 15.03%였다.

(3) 1958년의 도매물가는 해방후 처음으로 6.2% 하락하였고 성장을도 1957년의 7.6%에서 58년의 5.5%, 59년의 3.8%를 거쳐 60년에는 1.1%로 둔화되었다.

(4) 1962~66년간의 총투자율은 연평균 16.3%로 1957~61년의 12.7%보다 28.3%나 커졌고 국내 고정자본형성액은 23,478.9억 원으로 前期의 11,758.0억 원에 비하여 거의 2배에 이르렀다.

(5) 제 1 차 5개년계획기 간증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6.8%로 제 2 차 계획기 간증의 7.8%의 2배를 웃돌았다.

와 적극적인 外資導入政策⁽⁶⁾이 실시되었다.

국내 저축을 극대화하려던 정책 노력은 限界貯蓄性向이 큰 고소득층에게 限界所得의 보다 큰 부분을 주고자 하는 逆進的 再分配政策을 도입하였고 한 계소득을 더 크게 하려는 정책 노력은 생산의 효율이 큰 대기업을 特惠的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안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⁷⁾ 이러한 정책태도는 1980년까지는 名實 共히 1981~87년간에도 실질적으로 견지되어 왔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계획적 개발노력을 시작한지 25년 만인 1986년에 저축자금률을 108.3%로 높일 수 있었지만 분배구조악화⁽⁸⁾, 노사대립⁽⁹⁾, 재벌의 過剩肥大⁽¹⁰⁾라는 쉽사리 치유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반하여 수출드라이브정책과 外資導入政策은 그 역시 다소의 化石化된 後遺症을 남기고는 있지만 비교적 성공하여 수출드라이브정책의 경우 1974년 이후 '수출을 통한 성장' 패턴을 定着시킬 수 있었고, 의자도입정책의 경우 2차대전 이후의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外債依存的 成長(growth-cum-indebtedness)⁽¹¹⁾의 成功事例를 만들었다. 무역이 꾸준히 성장하여 수출입총액을 기준하여 세계 12위에 위치하게 되고 또 貿易黑字基調를 경착시키게 되었고, 1985년에는 468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제 4위의 債務國이 되게 하였던 總外債殘高는 1987년에는 356억 달러로 줄어 머지 않아 純外債를 제로로 만들 수 있게 된데에는, '황금의 60년대' (golden 60's)라고 불리웠던 60년

-
- (6) 1965년의 성급했던 韓日國交正常化는 1963~65년의 국제수지위기에 대처한다는 단기목표와, 借款導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장기목표를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지고 있었다. 사실 1961년 말에 2.1억 달러였던 金 및 外換보유고는 1963년 9월에는 1.1억 달러 미만으로 격감하였고 1964년 말에도 1.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다.
 - (7) 1963년 鎭工業센스보고의 자료에 의할 때 종업원 2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경우 고용량의 33.6%를 가지고 부가가치의 47.2%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종업원을 기준한 附加價值生產性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76.7%나 높았다.
 - (8) 1961년에 85.2%이던 노동소득의 크기(분배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와 비법인 기업소득의 합계)는 1980년에는 72.3%로 줄었다.
 - (9)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공공연한 정부탄압이 없어진 1987년 하반기의 勞動爭議는 3,625건(日평균 19.7건)으로 상반기의 124건(日평균 0.7건)에 비하여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10) 1973년에 5대 재벌의 제조업매상점유율은 8.8%이던 것이 1981년에는 38.1%로 커지고 20대 재벌의 그것은 21.8%에서 54.9%로 커졌다. 이는 金融借款이 50억원 이상인 회사만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의 점유율은 훨씬 더 클 것이다.
 - (11) 한국과는 달리 北韓은 차관의 존적 성장전략을 거부하고 自力發屈路線을 취하였다. 그 결과 1962년에 수출 224.0백만달러(한국은 54.8백만달러), 1인당 GNP 115달러(한국은 87달러)로 한국보다 앞섰던 북한이 1987년에는 수출 1,670.0백만달러, 1인당 GNP 936달러로 우리에 크게 뛰어게 되었다.

대의 유리했던 국제무역환경⁽¹²⁾ 등 외부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무역의 기적적 성취를 가져온 여러가지 국내적 요인을 다음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금융 등 모든 經濟主體가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수출의지(export-mindedness)라는 인간적 요인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적으로 수많은 試行錯誤를 거듭하고 국제적으로는 70년대 이후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資源不足型小規模經濟國⁽¹³⁾인 한국이 무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을 통하여 경제를 기필코 발전시키겠다는 人間意志, 인간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人的要因이 한국과 나머지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및 국제경제적 발전의 明暗을 달리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III. 國際經濟的 發展의 段階的 分析

한국의 국제경제적 발전은 수출은 연평균 25.0백만달러 정도로 정체되고 수입은 그 대부분이 무상원조에 의하여 支辨되었던 停滯期(1945~61), 높은 율의 발전을 지속하였던 效率的 成長期(1962~73),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수출신장률도 낮아진 成長鈍化期(1974~85), 그리고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고 成長效率도 되살아나기 시작한 黑字基調定着期(1986~)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停滯期(1945~61)

틴베르헨(Tinbergen, 1962)의 통계적 실증을 거론할 것도 없이 무역규모는 두 當事國의 GNP 크기에 비례하고 지리적 거리에 역비례한다. 한편 '무역은 國旗를 뒤따른다(Trade follows the flag)' (Kindleberger, 1962)는 말에

(12) 1952~59년간 세계수입증가율은 연평균 3.7%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하여 1960~69년의 그것은 9.1%였다.

(13) 한국은 賦存資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현대적 고도산업사회의 3대 전략자원인 석량, 철광석, 석유의 부존조건은 매우 나쁘다. 1960년에 90%이던 석량자급률은 1987년에는 40%로 하락하였고 철광석매장량은 1.2억t(浦項製鐵의 3년분 원료)이고 석유자원의 부존은 아직은 없다.

한편 1인당 GNP는 1986년 현재 2,370달러로 中國의 300달러를 8배가량 웃돌고 있지만 人口(와 國土)의 차이로 인하여 경제규모(=GNP)는 중국(3,162억 달러)의 3.2분의 1(=983.6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표 1〉 한국무역의 발전(I)(1955~61) 단위: 백만달러, %

		총 액	연 평 균	대 GNP 비율
수	출	174.8	25.0	1.4
수	입	2,521.3	360.2	20.4
무 역 적 자		2,346.5	335.2	18.9
무 상 원 조		1,934.4	276.3	15.6
무 역 외 수 취		412.1	58.9	3.3
G N P		12,386	1,769	—

자료: 한국은행, 경제연감,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한국의 국민소득, 1984.

서도 보듯 정치적인 親疎에도 비례한다. 정치기의 한국무역은 이러한 경제학의 命題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1954년 이전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분석을 무역통계를 동일한 時系列數值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1955년 이후로 국한할 때 한국의 국제경제적 활동은 〈표 1〉에서 보듯 매우 부진하였다. 연평균수출증가율은 18.7%로 수치는 크지만 수출절대액은 1955년의 18.0백만달러에서 1961년의 40.9백만달러로 22.9백만달러, 연평균 3.8백만달러씩 증가했을 뿐이고 수출은 수입의 6.9%를 支辨한 데 불과했다.

수출이 정치되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GNP가 작아서 자연히 수출공급능력도 를 수 없었다. 둘째, 해운, 보험, 금융 등 국제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설비가 全無한 상태여서 무역활동이 원활할 수 없었다. 세째, 1인당 GNP수준이 매우 낮아서⁽¹⁴⁾ 국내시장에는 항시 방대한 超過需要가 존재하였다. 이 기간 중의 海外貯蓄率은 연평균 8.6%였다. 네째, 이에 더하여 필요한 輸入需要의 대부분(76.7%)이 무상원조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었다. 그때문에 60년대 이후에 볼 수 있었던 국내초과수요를 무시한 수출 즉 飢餓輸出은 굳이敢行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섯째, 未成熟債務國의 한가지 특징인 貿易外計定의 黑字가 수출의 2.3배가 넘어 그런대로 수입수요의 16.3%를 輔墳해줄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무역총액의 48.8%는 미국과 일본 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셰어가 35.1%). 이를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 일본의 비중이 50.5%였고, 수입에서의 그것은

(14) 1955년의 1인당 GNP는 65달러, 1961년의 그것은 82달러였다.

각기 11.2%와 35.9%였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중이 커던 것은 정치적 유대의 긴밀성에 연유하는 것이었고 일본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 순위의 교역상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인접성에 주로 연유한다. 수출의過半이 일본을 상대로 한 것은 일본의 1차상품需給事情에도 크게 연유하는 것이지만 수입의 쉐어가 작은 것은 주로李承晚政權의反日政策때문이었다. 수입에서 미국의 비중이 큰 것 역시 무상원조라는 정치적 성격의 결정에 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效率的 成長期(1962~73)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패가 수출증대와 外資導入에 있다고 판단한朴正熙政權은 통상진흥법을 제정하고(1962. 3), 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1962. 6)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면서 맹렬한 수출드라이브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무역진흥정책을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급속히 신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은 없었다. 수출증대를 위한 기초적 생산시설이 취약하여⁽¹⁵⁾ 輸出餘力(export surplus)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대량생산을 통한 코스트 다운이 가져다 주는 國際競爭力도 생겨나지 못했었다. 무역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도 빈약하였고, 무역 및 무역경영에 관한 know-how의 축적도 보잘 것 없었다.

이러한 隘路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요인은 많았다. 첫째, 계획적 개발이 목표하는 高度成長을 위하여 投入輸入需要가 격증하였는데 그 상당한 부분은 수출증대를 통하여 충족시켜 주어야만 했다. 둘째, 원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생긴 저축부족의 채우기를 차관으로補填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자연히 차관에 대한擔保로서 수출규모를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隘路를 극복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첫째 2차상품으로의 수출상품구조전환과 수출산업의 건설이 동시에 진전되었다. 1962년에 27.0%에 불과했던 공산품수출비중이 1963년에는 51.7%, 1973년에는 88.2%로 커졌고, 1953~61년의 연평균 10.1%에서 이 기간 중 19.5%로 提高된 총투자 중 22.0%가 공업건설에, 7.6%가 電力 등 에너지, 27.7%가 도로 등 수송수단, 따라서 35.3%가 좁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배정되었다.

(15) 1962년 현재 제조업의 부가가치구성비는 14.3%였다.

둘째 低賃金을 통한 덤플링(social dumping)이 가장 적접적인 수출드라이브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62~68년 간의 제조업노동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23,541원으로 1961년 수준의 81.5%로 떨어졌다(1975년 불변가격). 적접적인 노임통제와 인플레이션에 의해 이루어진 실질임금의 이같은 하락은 두 가지 면에서 수출증대에 기여하였다. 우선 18.5%의 실질임금하락은 제조업의 노동비용을 1961년의 81.5% 수준으로 인하하는 코스트다운효과를 발휘하였고 그결과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커졌다. 다음으로 실질임금하락은 공산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그만큼 감소시켰고 그결과 경공업부문에서 수출여력이 창출될 수 있었다. 실질임금인하는 價格과 物量 양면에서 수출증대에 적극 기여하였다.

세째로 換dumping을 들어야 한다. 1962년을 기준할 때 換率上昇은 1966년에는 208.8, 1971년은 285.2, 1973년에는 305.8로 1971년까지는 환율인상률이 언제나 물가상승률을 앞질렀다.⁽¹⁶⁾ 1962~71년의 경우 물가상승이 환율인상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수출드라이브를 위한 換dumping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되는 因果의 顛倒가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補助金dumping을 들어야 한다. 特惠金利 및 갖가지 租稅의 減免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정책적으로 높혀주는 강력한 작용을 하였다. 조세와 특히 금융상의 特惠는 소시얼 덤플링 및 換dumping이 사실상 어려워진 1974년 이후에는 계속되어 아직까지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위에서 말한 強力的인 수출촉진정책 이외에 企業別, 組合別, 公館別 수출 목표량의 할당 등에 힘입어 61년에 41백만달러였던 수출은 1973년에는 323백만달러로 연평균 45.0%의 신장률을 기록하였고 輸出彈性值도 3.44로 매우 커졌다. 같은 기간 중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27.0%로 수출신장률을 크게 밀돌아 수출입비율은 1961년의 100대 773.4에서 1973년의 131.5로 크게 축소되었지만 무역적자는 무역규모가 확대된 까닭에 2.8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3.7배 가량 커졌다.

이 기간 중의 한가지 특징은 일본의 ‘수출을 통한 성장’ 패턴과는 달리 높은 수출신장률에도 불구하고 交易條件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1963년에 대

(16) 1962년을 100으로 할 때 도매물가지수는 1966년에는 195.0, 1971년에는 283.9이 있고 1973년에는 345.3이 있다. 1962년을 기준할 때 1972년의 환율은 306.5, 물가는 323.0이었다.

〈표 2〉 한국무역의 성장(1962~87)

	1961	1962~73	1974~85	1986	1987
수출규모 ¹⁾ 백만달러	40.9	737.0	16,640.9	34,714.5	47,280.9
수출증가율 %	24.5	45.0	21.2	14.6	36.2
수출탄성치	5.21	3.44	1.81	1.60	2.14
수입규모 ¹⁾ 백만달러	316.2	1,499.1	19,137.8	31,583.9	41,019.8
수입증가율 %	-8.0	27.0	19.3	1.4	29.9
수입탄성치	—	2.01	1.68	0.13	1.65
부역적자 ¹⁾ 백만달러	275.3	762.1	2,496.9	+3,130.6	+6,261.1
교역조건지수 ²⁾	—	118.4	100.0	108.8	111.5
교역조건변화율 %	—	1.3	-1.3	8.8	2.5
환율 ²⁾ (1달러 대 원)	130.0	397.5	890.2	861.4	792.3
환율변화율 %	—	17.2	10.3	-3.2	-8.0

1) 연평치임.

2) 기말연도값임.

자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년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각년호.

비하여 12.9%나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¹⁷⁾ 이는 계속된 임금억압정책에도 불구하고 投資인플레이션으로 인한 原價高를 수출가격에 전가하지 않을 수

〈표 3〉 한국의 외자도입(1962~87)

	1962~73	1974~85	1986	1987
국민저축률 %	21.4	30.5	32.6	35.6
해외저축률 //	8.5	6.3	-2.7	-6.4
저축자금률 //	60.3	79.3	108.3	118.0
외자도입 백만달러	5,352	26,707	2,500	2,667
원조 //	1,286	6	—	—
공공차관 //	1,752	13,113	880	1,109
산업차관 //	2,314	13,588	1,620	1,559
외채잔고 / GNP %	32.0 ¹⁾	55.8 ²⁾	46.7	30.0
원리금상환액 ³⁾ 백만달러	1,316	22,716	3,895	6,364
원리금상환부담률 %	6.6	9.3	4.1	5.4

1) 1973년

2) 1985년

3) 합계액임

자료 : 〈표 1〉과 같음.

(17) 1963~73년간의 교역조건지수는 평균 113.9(1963=100)였으며 가장 유리했던 1968년의 그것은 123.9였다.

없기 때문에 수출단가가 높아졌고⁽¹⁸⁾ 1962~73년간의 비교적 유리했던 세계 수입시장조건이 그 같은 가격상승을 수용할 수 있었던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듯 이 기간 중 도입된 外資總額은 5,352백만달러로 연평균 446백만달러였다. 그중 무상원조가 전체의 24.0%였고 공공차관이 32.7%, 나머지 43.7%가 산업차관이었다. 원리금상환액은 총 1,316백만달러였고 GNP에 대한 외채잔고비율은 1973년 현재 32.0%에 까지 달하였지만 GNP에 대하여 30.5%가 될만큼 急伸張한 수출에 주로 힘입어 부채상환율은 이 기간 중을 통하여 평균 6.6%로 위험선이라고 통속적으로 말하는 15%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3. 成長鈍化期(1974~85)

1973년을 고비로 한국무역을 위한 국내외 與件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결과 교역조건의 계속되는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탄력성을 잃어 輸出伸張率은 크게 둔화되고 무역적자는 엄청나게 커지고 외채잔고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이 기간 중 수출신장률은 연평균 21.2%로 하락하여 수입신장률 19.3%와 거의 비슷하게 되었고, 수출탄성치도 1.81로 작아져 수입탄성치 1.68과 거의 같아졌다. 1964~73년간을 통하여 연평균 1.3%씩 개선되어 왔던 교역조건은 오히려 1.3%씩 악화되어 갔다. 그러나 수출증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1985년의 수출입은 100.0대 102.8로 거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무역균형실현의 과정에서 2,496.9백만달러, 연평균 208.1백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누적되어 갔다.

이 기간 중의 무역신장률둔화를 가져온 국내외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적 요인으로는 첫째로 노동력의 무제한공급조건의 소멸을 들 수 있다.⁽¹⁹⁾ 효율적 성장기에 각기 연평균 3.09%와 3.36%이던 15세 이상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성장둔화기에는 각기 2.69%와 2.72%로 코개 줄어들었다. 그결과 1970년을 고비로 하여 노동시장에서도 購買

(18) 1973년의 수출단가지수는 156.6이 있으며 수입단가지수는 138.9였다. (1963=100) 또 1972년의 그것은 각기 123.7과 104.0이었다.

(19) 근대부문의 노동력공급탄력성은 1964~73년의 평균 1.33에서 1974~79년에는 0.66으로 작아졌다. 裴茂基, “한국노동경제의 구조변화”, 서울대학교 경제연 구소, 「경제논집」 21권 4호, 1982. 12.

者市場的인 성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실질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었고⁽²⁰⁾ 또 노동자의 실질소득증대에 따른 内需壓力이 빠른 물가상승을 일으켜⁽²¹⁾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구증가, 자본축적, 경제성장에 따르는 토지공급부족도 比較優位構造를 변화시키고 또 比較優位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1인당 GNP의 증가와 저축률의 상승으로 저축은 코개 늘어 취업자 1인당 자본형 성액은 1973년의 49천원에서 1985년의 1,187천원으로 크게 늘었다. (1980년 불변가격)

노동력, 토지, 자본 등 外延的 成長要素의 불균등한 공급은 생산요소의 결합을 最適狀態에서 일탈시키고 그 결과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따라서 요소공급의 탄력성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는 기술혁신의 템포를 빨리 함으로써 생산요소가 항상 새로운 최적결합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浦項製鐵의 건설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시작된 1970년대의 重化學工業化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기술혁신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非人間資本(non-human capital)의 극대동원에 치중하여 人間資本(human capital)의 개발축적을 등한시한 결과 경제사회가 요청하는 기술을 適期에 自主的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는 성공할 수 없었다.

제도 역시 外延的 成長要素 간의 不調化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1974년 이후 필요한 제도적 변화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구조의 복잡화 및 기술의 고도화, 외연적 생산요소 중 토지·노동력의 공급탄력성 상실 등에 비추어 볼 때 1960년대에 構築된 命令經濟體制를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사에 비추어보나⁽²²⁾ 比較經濟體制理論에 비추어 보나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의 한국에서는 71년의 司法波動, 72년 8월의 8.3조치, 10월 17일의 緊急措處 등 시장을 거부하고 명령을 가일총 강화하는 強力으로 대처하였다. 그 결과 調整機制의 효율은 더욱 하락하여 가격의 정상적인 형성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은 더욱 손상되

(20) 1962~69년간에 6.9%, 연호균 겨우 0.9%씩 증가했던 제조업실질임금은 1970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70~85년간에는 3.0배, 연평균 12.6%씩 상승하였다.

(21) 1974~85년 중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5.4%로 前期의 11.9%보다 컸다.

(22) 1950년대에 소련 및 東歐共產國家에서 일어난 社會主義經濟改革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조직 및 제도개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cf. J. Wilczynski,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1972.

었다.

국외적 요인을 보면 1960년대를 통하여 심화되어 왔던 달러危機가 1971년 8월의 닉슨新經制政策을 계기로 브레튼 우즈體制의 붕괴를 가져왔고 국제통화제도의 모순으로 야기되었던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1974년에는 석유를 선두로 심각한 原資材波動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선진공업국은 실업,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적자라는 '불안한 3각형'에 시달리게 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전세계에 만연하게 되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캐네디 라운드의 졸속한 타결이 불러일으켰던 非關稅障壁을 더욱 부채질하여 세계경제는 1870년대 이후 1930년대에 이어 또 다른 貿易戰爭에 돌입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무역정책은 매우 심각하여 1981~83년간에 세계수입은 10%나 감소하였다.

4. 黑字基調定着期(1986~)

成長鈍化期에 수출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수입신장률을 계속 웃돌았고 또 효율적 성장기에 수출입비율을 크게 개선한 데 힘입어 한국무역은 1986년에는 31.3억 달러, 1987년에는 62.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1988년 상반기에도 29.9억 달러의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88년 들어 다소의 물가불안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9월 말 현재 도매물가지수는 102.1로 1985년에 비하여 2.1% 상승에 그치고 있다. 성장률도 1986~87년간 연평균 12.2%로 다시 弾力を 찾았고 수출신장률은 86년의 14.6%에서 87년에는 36.2%로 커지고 있다. 한편 세계수입도 86년의 9.1% 증가에서 87년에는 16.9% 증가로 그 역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黑字基調定着期의 한국무역은 안으로는 임금상승과 평가절상의 어려움이 있고 밖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간에 보호주의 무역색채가 놓후해져 갖가지 수입규제가 가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수출기반은 1962년 이후의 성공적인 경제건설에 힘입어 매우 공고하고⁽²³⁾ 무역

(23) 1987년 현재 제조업의 부가가치구성비는 34.6%이고 제조업 GNP는 410.4억 달러에 이르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57.5%이어서 중화학공업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3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국수출의 94.8%가 공산품이고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38.5%이므로(1987) 공업기반이 공고해지고 또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된다.

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마련도 차츰 충실해지고 있으므로⁽²⁴⁾ 안으로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마련되고 밖으로 종래의 不公正貿易慣行만 청산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무역발전과 무역을 통한 성장의 길은 단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IV. 國際化時代의 課題

전문가까지도 포함한 다수 국민에 의해 아직도 의구시되고는 있지만 7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의 무역추세를 보면 한국무역이 黑字基調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때때로 赤字를 시현하는 일은 있겠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構造的不均衡에 시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한국무역이 흑자기조를 정착시켰다는 사실과 또 한국이 세계 제12위의 貿易大國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은 국제경제사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하여 새로운 과제를 부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새로운 과제란 첫째 국제경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고, 둘째가 무역대국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과제를 우리는 무역과 외환 및 경제협력의 세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貿 易

무역과 관련되는 과제는 GATT의 理想에 충실하고 그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GATT의 이상이란 곧 關稅主義와 互酬主義이다.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규제수단은 이를 不法化하고 관세 자체는 계속 인하하여 끝내는 관세없는 自由貿易世界를 실현시키라는 것이고 互酬主義란 國別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平等主義이다. 이러한 이상은 매우 높은 것이어서 그 실현여부는 의문시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경주되어 왔고 우리 또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이같이 볼 때 정부가 세우고 있는 대책은 방향은 백% 옳으나 시기에는

(24) 무역외계정 중 운수·기타운수·보험에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에는 受入이 5.1백만달러(무역외수입의 4.8%), 支給이 32.9백만달러(54.0%)로서 27.8백만 달러의 赤字이었고 受入支給比率은 1대 6.5였다. 그러던 것이 1987년에는 수입이 2,028.4백만달러(19.4%), 지금이 2,471.7백만달러(27.6%)가 되어 적자폭은 443.3백만달러로 커졌으나 受入支給比率은 1대 1.2로 축소되었다.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관세의 경우 정부는 1993년까지 OECD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춘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다.⁽²⁵⁾ 그러나 아무리 낮추어 잡더라도 91년까지는 對外純債權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93년에 OECD 수준 관세율이란 대외경제정책은 GATT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 채 무역분쟁의 씨가 될 것이다. 국내경제정책만 합리적으로 전개하여 한국 국민의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살린다면 6차개발계획이 끝나는 1991년까지는 OECD관세율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수입규제·국내산업보호적 성격의 비관세장벽을 완화가 아니라 조속한 시일 안에 철폐해야 한다. 국제경제사회의 기본원리는 互酬이므로 우리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의해 수출이 저해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GATT 이상의 또 하나의 측면은 國際收支의 均衡이다. 이는 자유무역주의가 처음부터 전제하였고 또 실현시키고자 했던 목표이며 互酬主義는 궁극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이란 상태를 모든 무역당사국에 가져다 줄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수지균형에 더하여 또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류가 하나의 世界社會를 이루하지 못하고 國民國家로 갈라져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합적인 국제수지균형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國別收支均衡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國際收支均衡 문제에 있어 우리는 1986~87년의 黑字에도 불구하고 1955~85년 간에 누적된 赤字殘高 321.0억 달리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1987년 말 현재 224억 달러라는 純外債로 남아 있다. 순외채를 전부 없앨 때까지는 出超는 불가피하다. 혹자를 줄여 외채의 완전상환을 늦추느냐 그렇지 않으면 혹자를 키워 외채를 빨리 상환하느냐 하는 것은 임의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외채상환을 서두르고 그 후에 혹자를 줄일 것이냐 또는 그대로 두고 이를 무상원조 등 국제경제협력 기금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그때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 다만 우리는 국제수지혹자는 자유무역주의 이상에 어긋나고 혹자국을 위해서는 경제적

(25) 관세 인하방침은 다음과 같다.

원료, 현행의 5~10%에서 1~3%
공산품 " 20%에서 8%
(특히 소비재 현행의 30~50%에서 8%)

〈표 4〉 한국무역의 國別收支(1987)

	무역수지 (백만달러)	수출입비율 (%)		무역수지 (백만달러)	수출입비율 (%)
총 무 역	6,261	115.3	오 스 트 랠 리 어	-660	48.4
미 국	9,553	209.1	프 랑 스	96	112.2
일 본	-5,220	61.8	말 래 이 지 아	-787	27.6
독 일	203	111.3	싱 가 포 르	496	214.9
홍 콩	1,808	556.6	자 유 중 국	-204	73.1
캐 나 다	504	153.2	이 탈 리 아	15	102.8
영 국	804	211.4	인 도 네 시 아	-585	29.2
사우디아라비아	-35	96.7	네 덜 랜 드	503	288.9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8. 9.

합리성이 없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국제수지균형보다 더 심각한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國別收支이다. 우리의 對日感情과 韓日貿易摩擦은 1945년 이전의 식민지지배 못지 않게 1955~87년 간에 일방적으로 누적된 439.8억 달러의 무역적자에 기인하는 것이다. 무역적자와 그 결과인 채무가 隸屬의 길임은 예나 이제나 다름없다.

그런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5위까지의 주요무역대상국과의 국별수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매우 不均衡한 상태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국별수지가 균형의 근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두나라 뿐이다. 또 종합수지 비율 안에 드는 나라를 보더라도 독일과 프랑스가 추가될 뿐이다. 해묵은 韓日貿易紛爭이 52.2억 달러의 入超, 1대 1.6의 逆調比에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95.5억 달러의 黑字, 2.1대 1의 順調比가 韓美貿易紛爭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도하지 않은 關稅率과 그 조속한 인하, 시장보호목적을 가진 모든 비관세장벽철폐, 흑자대책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국별수지불균형해소가 국제화시대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무역면에서의 과제라 하겠다.

2. 外換・資本

GATT의 관세없는 자유무역에 대응하는 것이 IMF의 환제한철폐이다. 이 두 가지는 표리일체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實物과 화폐의 양면에서 자유무역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는 국제경제적 정책수단이다. 안정적인 무역수지 불균형에 시달려왔던 경험에서 환율인하 즉 평가절상은 무역발전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경제원리란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율인상 즉 평가절하는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장치를 價格體系 속에 内裝(built-in)시키는 것이고, 반대로 환율인하 즉 평가절상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절하는 무역적자해소를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뒤집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黑字解消策은 평가절상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며 사실도 그렇다.

단계적 수입개방은 選別性을 갖는다. 赤字貿易에서 黑字貿易으로의 전환기에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선별적 수입개방은 개방압력을 특정한 산업에 집중시키므로 특정산업의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평가절상은 수입경쟁압력을 모든 경제부문에 분산시키므로 비효율적 기업과 比較劣位產業만 선별적으로 또 충분한 時差를 수반하면서 도태시키게 된다는 利點이 있다. 평가절상은 기업에 불리하고 소비자에게만 유리한 것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도 않다. 수입과 純外債의 합계가 수출보다 큰 동안은 기업도 수출에서 손해본 것을 수입과 외래원리금상환면에서 보상받고도 남는 것이 있게 된다.

물론 시장개방과 평가절상을 우리가擇一할 수도 없고 두가지 정책면 모두에서 국제화시대에 상응하는 自由化를 추진해야 하지만 戰術的으로는 평가절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옳았다. 이러한 政策 미스는 일부는 종래의 환덤핑 慣行에 익숙해 있던 정부·業界의 안이한 사고 때문이라고 하겠다.

黑字基調가 정착된 지금 환율은 더 이상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實物의 흐름 즉 貿易收支의 變動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원貨對外價值는 계속 상승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는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시대의 한국무역에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이고, 국내적으로는 국내생산이 부족할 때는 수입에 의해서라도 소비자에게 값싸고 품질좋은 재화를 공급한다는 기업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換管理철폐는 당연히 金融 및 資本去來의 自由化를 가져온다. 일부 전략산업과 공공·공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완전자유화하고 자본시장도 국제화함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 증권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제화시대 한국경제의 불가피한 과제이다. 이 중 외국인 적

〈표 5〉 환율변동추이

연 도	한 국		일 본		서 독		자 유 중 국	
	원	지 수	円	지 수	M	지 수	NT \$	지 수
1962	130.0	14.6	360.0	179.6	3.9980	162.4	40.0	100.5
1973	397.5	44.7	271.7	135.5	2.7030	109.8	38.3	96.2
1985	890.2	100.0	200.5	100.0	2.4613	100.0	39.8	10.0
1986	861.4	96.8	159.1	76.4	1.9408	78.9	37.8	95.0
1987	792.3	89.0	123.5	61.6	1.5815	64.3	31.8	79.9
1988. 9	719.0	80.8	134.3	67.0	1.8798	76.4	28.9	7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 1988.10.

접투자의 완전자유화는 시일을 늦출 필요가 없다. 한국산업의 경쟁체질은 매우 강하므로 90년부터는 완전자유화를 할 수 있도록 산업개편 및 기업체 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간접투자의 경우는 직접투자의 경우보다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증권시장의 국제화에 앞서 은행의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일반은행은 아직도 大型化되지 못하고 經營技法도 낙후되어 있으므로 은행 및 증권회사의 大型화와 경영쇄신이 성공적으로 선행된 다음 간접투자의 자유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기업에 비하여 한국의 금융은 아직도 자유로운 국제경쟁을 할 만큼 경쟁력을 提高하지는 못하고 있다.

3. 經濟協力

세계은행자료에 의하면 1986년 현재 債務國은 한국을 제외할 때 82개국으로 채무총액은 919,385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²⁶⁾ 그런데 저소득 39개국 중 부탄을 비롯한 7개국, 하위중소득 34개국 중 모로코, 상위중소득 18개국 중 말레이지아 등 6개국만이 외채가 없거나 외채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으로

(26)		외 채 잔 고 (백만달러)	평 균 외 채 규 모 (백만달러)
저 소 득 국	32	142,425	4,451
하 위 중 소 득 국	34	306,117	99,003
상 위 중 소 득 국	18	515,952	28,664
계	84	964,494	11,482(평균)

자료 : World Bank, 1988.

로 되어 있다. 상위중소득국에 속하는 남아프리카연방, 싱가폴 등은 채무국 단계를 탈피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할 때 97개 중·하위소득국 중 한국을 제외한 90개국이 앞으로도 당분간 또는 상당기간 계속해서 外資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 같은 發展途上國들의 外資所要에 대하여 1986년 현재 OECD 18개국에서 36,541백만달러, OPEC 10개국에서 4,853백만달러의 公的 開發援助가 주어지고 있을 뿐이다(World Bank, 1988).⁽²⁷⁾ 한국은 1986~88년간에 0.8억 달러의 公的 開發援助를 제공한 바 있는데 이는 GNP의 0.07%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 규모를 1991년까지는 GNP의 0.15%에 해당하는 3.4억달러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公共資金支援도 확대할 방침이 확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貿易黑字國의 선택은 네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출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며, 세째는 흑자를 유상의 차관 및 투자로 처분하는 것이고, 네째는 이를 무상원조로 처분하는 것이다. 이중 수출을 줄인다는 것은 비교우위산업에서 비교열위산업으로 즉 생산성 높은 용도에서 생산성 낮은 용도로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으로 경제적 처방은 될 수 없다. 한편 차관으로 제공하거나 직·간접투자로 처분하면 언제까지나 이자 및 이율으로 輸入需要도 충족하고 또 다른 차관·투자도 가능하여 일종의 金利生活者的 安樂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成熟債權國의in 特惠, 금리생활자적 안락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성숙채권국이 된 영국의 특권은 40년을 못넘겼고 영국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오른 미국의 특권도 30년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번째의 국제경제사회의 금리생활자가 되고자 하지만 설혹 될 수 있었다고 그 영화가 미국보다 오래 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최선의 길은 수입을 늘림으로써 한편으로는 값싼 재화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에게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互酬라는 국제경제의 大義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黑字基調가 정착되면 당분간은 흑자의 누적이 계속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이를 對外債

(27) GNP에 대한 원조비율은 OECD가 평균 0.10%, OPEC가 1.43%이다.

務償還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는 무상원조를 활용하는 것이 資源不足型 小規模經濟國에게 共存共榮의 장래를 약속하는 길이 될 것이다.

V. 맷 는 말

지금까지의 성취를 바탕으로 國際化時代의 한국이 貿易과 經濟協力 양면에서 세계 제12위의 무역대국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려면 국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커다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는 정신적인 것으로서 국제화시대를 擔持해 나갈 수 있는 意識構造를 갖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개방경제에 견디어 낼 수 있는 經濟構造를 갖는다는 것이다. 올림픽후의 한국경제가 국제경제적 관련하에서 실천해야 할 2대 变革은 바로 이것이다.

意識構造改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생산과 소비에서 국민적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다. 수입의존도가 40%이고 곡물수입의존도가 60%인 지금 국산품·수입품의 구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IMPORT content의 大小문제일 뿐이다. 더우기 무역수지 흑자경제는 활발한 해외 직접·간접투자를 유발할 것이므로 생산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더욱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경제사회의 경기규칙(rule of game)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韓末의 關稅交涉에서 ‘善隣을 하자는 군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 있겠느냐’고 한국측 대표가 발언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不平等貿易을 강제하는 것이나 관세를 일방적으로 양허한다는 것이나 모두 경기 규칙에 어긋난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만큼 상대방에게 배운다’는 互酬의 원리, give and take 정신에 좀 더 투철해야 되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와의 교섭 내지 무역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국제경제사회에는 아직도 힘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항상 우리의 GNP가 1.2천억달러 수준이라는 것, 1천억달러 GNP로 42.2천억달러의 미국경제, 15.6천억달러의 일본경제와 힘으로 겨룰 수 없다는 것, 따라서 rule은 지키되 부당한 rule은 같은 처지에 있는 제3세계국가들과 연합하여 고쳐나가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일본이 현재 그렇듯이 42.2천억달러經濟, 15.6천억달러경제는 국제경제사회에서 無

法者노릇을 계속할 수 있어도 1.2천억 달러 경제는 그럴 수 없고 유일한 길이 국제무역의 大道를 걷는다는 것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화시대를 위한 產業構造改編은 산업건설을 1차적으로 比較優位를 기준 삼고 여기에 경제외적 요인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모든 산업은 비교우위 산업, 유치 산업, 국민 산업, 단순한 비교열위 산업의 네개로 구분된다.

비교우위 산업은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이므로 당장 수입을 완전 개방해도 타격이 있을 수 없다. 유치 산업은 현재로서는 국제경쟁력이 없으나 일정한 기간동안만 완전히 보호한다면 비교우위 산업으로 성숙할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유치 산업에 대해서는 성숙기간 동안 완전한 보호를 해야 한다.

현재도 국제경쟁력이 없고 앞으로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지만 경제외적 중요성이 매우 큰 산업이 있으니 米作農業, 석탄 산업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국민적 중요성이 큰 산업을 國民產業이라고 부를 때 국민 산업은 영구히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유치 산업과 달리 보호는 限時的이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 보호에 따르는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으므로 국민적 중요성에 따른 차등적 보호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즉 각 財貨가 갖는 국민적 중요성을 기준삼아 예컨대 쌀은 X%, 쇠고기는 Y%, 석탄은 Z% 등등의 自給率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이같은 보호율은 일정기간마다 다시 산정하여 높이고 낮추는 작업을 한다.

비교우위가 없으면서 유치 산업이나 국민 산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산업을 단순히 비교열위 산업이라고 할 때 비교열위 산업은 적절한 산업전환정책을 통하여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교열위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의 완전개방에 의해 완전히 도태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비교우위가 작은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입경쟁에 이길 수 있는 효율적 기업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므로 수입개방으로 인한 競爭的淘汰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Kindleberger, C.P.

1962 *Foreign Trade and National Economy.*

Tinbergen, Jan

1962 *Shaping the World Economy.*

World Bank

1988 *World Development Report.*